

실무 1

온라인 동영상	(02) 6331-1009	자료제공 : 김재규 교수	www.kimcodi.com
서울 김재규경찰학원	(02) 823-3112		
광주 김재규경찰학원	(062) 236-3112		
안동 김재규공무원·경찰학원	(054) 823-9112		

1 일반적 조직편성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통솔범위의 원리는 1인의 상관 또는 감독자가 효과적으로 직접 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수에 관한 원리이다.
- ② 계층제의 원리란 직무를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등급화하는 수직적 분업의 일종으로서 통솔범위가 넓어지면 계층의 수도 많아지고, 통솔범위가 좁아지면 계층의 수도 줄어든다.
- ③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원의 행동통일을 기하도록 집단적 노력을 질서있게 배열하는 과정은 조정의 원리에 관한 내용이다.
- ④ 분업의 원리는 조직의 종류와 성질, 업무의 전문화 정도에 따라 기관별·개인별로 업무를 분담하게 한다.

해설 ▶ ①③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② 계층제란 직무를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등급화하고 상하 계층간에 지휘·명령복종 관계 또는 단일의 의사결정 중추를 확립하는 것으로 수직적 분업의 일종이다. 계층제와 통솔범위는 역관계로 통솔범위가 넓어지면 계층의 수는 줄어들고, 통솔범위가 좁아지면 계층의 수는 많아진다.

정답 ②

2 「국가공무원법」상 휴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 ②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임용권자는 그 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시켜야 한다.
- ③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 ④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해설 ▶ ①③④ 국가공무원법 제73조

②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임용권자는 그 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동법 제70조 제1항 제4호).

정답 ②

3 경찰공무원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 ②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 ③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는 국가경찰공무원 중 경정, 경감, 경위, 경사를 재산등록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 ④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해설 ▶ ①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② 동법 제60조
 ③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6호
 ④ 경찰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이 아니라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경찰공무원법 제20조 제1항).

정답 ④

4 경찰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찰공무원 징계령」상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행위자가 업무매뉴얼에 규정된 직무상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 징계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계책임을 감경하여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하거나 징계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경찰공무원법」상 총경과 경정의 파면 및 해임, 경무관과 총경의 강등 및 정직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해설 ▶ ①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1항
 ②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3호
 ③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④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하고, 총경 및 경정의 강등 및 정직은 경찰청장이 한다(경찰공무원법 제27조).

정답 ④

5 인사혁신처에 두는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한다.
- ②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

※ 무료강의 및 기출문제 자료는 www.kimcodi.com 에서 제공됩니다.

면 제기할 수 없다.

- ③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기 전이라도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④ 소청심사위원회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 행정청에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

- 해설** ▶ ①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
 ② 동법 제16조 제1항
 ③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동법 제14조 제6항).
 ④ 동법 제14조 제5항 제3호

정답 ③

6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공가의 사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 ②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③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 ④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 해설** ▶ ①②④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 제2호·제7호·제10호
 ③ 이는 직권 휴직사유이다(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1호).

[핵심정리] 국가공무원 공가 사유(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

1.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포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건강진단 또는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7. 헌혈에 참가할 때
8.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9.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10.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11. 공무원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하거나 대의위원회에 참석할 때
12. 공무원외출장등을 위하여 오염지역 또는 오염인근지역으로 가기 전에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정답 ③

7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업무관리시스템’이란 행정기관이 행정정보를 생산·수집·가공·저장·검색·제공·송신·수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합한 시스템을 말한다.
- ②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전자문서의 경우는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 등에 입력되는 것을 말한다)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공고문서는 그 문서에서 효력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면 그 고시 또는 공고 등이 있는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성립한다.
- ③ 수신자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문서를 접수한 처리과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미 발신한 문서의 수신자를 변경하거나 추가하여 다시 발신할 수 있다.
- ④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위임전결하는 경우에는 전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전결’ 표시를 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명 또는 ‘전결’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서명란은 만들지 아니한다.

- 해설** ① “업무관리시스템”이란 행정기관이 업무처리의 모든 과정을 과제관리카드 및 문서관리카드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1호). 행정기관이 행정정보를 생산·수집·가공·저장·검색·제공·송신·수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합한 시스템은 “행정정보시스템”이다(동규정 제3조 제12호).
- ② (1)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전자이미지서명, 전자문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동규정 제6조 제1항). (2)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공고문서는 그 문서에서 효력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면 그 고시 또는 공고 등이 있는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동규정 제6조 제2항·제3항).
- ③ 수신자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문서를 생산한 처리과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미 발신한 문서의 수신자를 변경하거나 추가하여 다시 발신할 수 있다(동규정 제15조 제4항).
- ④ 동규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제4항

정답 ④

8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Ⅰ급비밀’·‘Ⅱ급비밀’·‘Ⅲ급비밀’로 구분하며, 비밀 중 예외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대외비’로 한다.
- ② 비밀의 분류원칙은 「보안업무규정」에 규정되어 있으며,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고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
- ③ Ⅰ급비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서는 그 생산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 모사(模寫)·타자(打字)·인쇄·조각·녹음·촬영·인화(印畵)·확대 등 그 원형을 재현(再現)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 ④ 비밀을 복제하거나 복사한 경우에는 그 원본과 동일한 비밀등급과 예고문을 기재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예고문에 재분류 구분이 ‘파기’로 되어 있더라도 원본의 파기 시기보다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없다.

※ 무료강의 및 기출문제 자료는 www.kimcodi.com 에서 제공됩니다.

- 해설** → ①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Ⅰ급비밀’·‘Ⅱ급비밀’·‘Ⅲ급비밀’로 구분한다(보안업무규정 제4조). 비밀 외에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한다(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 ②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동규정 제12조 제1항).
- ③ 동규정 제23조 제1항 제1호
- ④ 비밀을 복제하거나 복사한 경우에는 그 원본과 동일한 비밀등급과 예고문을 기재하고, 사본 번호를 매겨야 한다. 예고문에 재분류 구분이 “과기”로 되어 있을 때에는 원본의 파기 시기보다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동규정 제23조 제4항·제5항).

정답 ③

9 경찰홍보와 관련하여 다음 () 안에 들어갈 말을 나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는 신문·잡지·TV 등의 보도기능에 대응하는 활동으로 대개 사건·사고에 대한 질의에 답하는 대응적이고 소극적인 홍보활동을 말하고, (㉡)는 주민을 소비자로 보는 관점으로 유료광고·캐릭터 활용 등의 방법이 있다.

- ① ㉠ 언론관계 ㉡ 지역공동체관계
- ② ㉠ 언론관계 ㉡ 기업식 경찰홍보
- ③ ㉠ 대중매체관계 ㉡ 지역공동체관계
- ④ ㉠ 대중매체관계 ㉡ 기업식 경찰홍보

해설 → ㉠ 언론관계이고 ㉡ 기업식 경찰홍보이다.

[핵심정리] 홍보

구분	내용
협회의 홍보(공공관계) (Public Relations)	유인물·팸플릿 등 각종 매체를 통해 개인이나 단체의 좋은 점을 일방적으로 알리는 활동
지역공동체관계 (Community Relations)	지역사회 내의 각종 기관 단체 및 주민들과 유기적인 연락 및 협조체제를 구축, 지역의 요구에 부응하는 경찰활동과 경찰활동을 알리는 종합적인 지역사회 홍보체계
언론관계 (Press Relations)	신문·잡지·TV 등의 보도기능에 대응하는 활동으로 대개 사건·사고에 대한 질의에 답하는 대응적이고 소극적인 홍보활동
대중매체관계 (Media Relations)	각종 대중매체 제작자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유지하여 대중매체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한편 경찰의 긍정적인 측면을 널리 알리는 적극적 홍보활동
기업식 경찰홍보	주민을 소비자(Consumer)로 보는 관점으로 유료광고, 캐릭터 활용 등의 홍보활동

정답 ②

10 「경찰행정 사무감사 규칙」 제21조(감사결과의 조치기준 등)에 대한 내용이다. ㉠부터 ㉥까지의 내용에 해당하는 조치를 나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피감사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피감사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 ① ㉠ 권고 ㉡ 시정 요구 ㉢ 경고·주의
- ② ㉠ 개선 요구 ㉡ 시정 요구 ㉢ 통보
- ③ ㉠ 권고 ㉡ 개선 요구 ㉢ 경고·주의
- ④ ㉠ 개선 요구 ㉡ 권고 ㉢ 통보

해설 → 경찰행정 사무감사 규칙 제21조

①의 연결이 옳다.

[핵심정리] 감사결과의 조치기준

구분	내용
징계 또는 문책 요구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시정 요구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고·주의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피감사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개선 요구	감사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권고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피감사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보	감사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징계 또는 문책 요구부터 권고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피감사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고발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답 ①

11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보행자전용도로'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 ② 차량 신호등이 '황색의 등화'인 경우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 ③ '규제표지'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를 말한다.
- ④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는 14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해설 → ①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31호).
 ② 차량 신호등이 '황색의 등화'인 경우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차마는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2]). 지문은 '적색의 등화'에 관한 설명이다.
 ③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2호
 ④ '어린이'는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23호).

정답 ③

12 적재중량 2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폭설로 가시거리가 20미터인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고 있다. 이때 운행할 수 있는 최고속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로 가정함)

- ① 매시 40킬로미터
- ② 매시 45킬로미터
- ③ 매시 50킬로미터
- ④ 매시 60킬로미터

해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핵심정리] 자동차 등의 속도(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구분	도로구분	최고속도		최저속도
일반도로	편도 1차로	60km/h		제한 없음
	편도 2차로 이상	80km/h		
자동차전용도로	-	<u>90km/h</u>		30km/h
고속도로	편도 1차로	80km/h		50km/h
	편도 2차로 이상	일반	원칙 : 100km/h(*예외 : 120km/h)	
*화특위건		원칙 : 80km/h(*예외 : 90km/h)		

- 1. *화특위건 : 화물자동차(적재중량 1.5톤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특수자동차·위험물운반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
- 2. *예외 : 경찰청장이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한 노선 또는 구간을 말한다.

※ 무료강의 및 기출문제 자료는 www.kimcodi.com 에서 제공됩니다.

3.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또는 눈이 20mm 미만 쌓인 경우에는 최고속도의 20/10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고, 폭우·폭설·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또는 눈이 20mm 이상 쌓인 경우에는 최고속도의 50/10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정한 최고속도와 그 밖의 안전표지로 정한 최고속도가 다를 때에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에 따라야 한다).

정답 ②

13 「도로교통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 진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자동차전용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 앞지르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 ①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
 ② 동법 제13조의2 제5항
 ③ 동법 제65조 제2항
 ④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62조). 따라서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앞지르기를 할 수 있다.

정답 ④

14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하여 「도로교통법」 제151조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 ② 긴급자동차는 자동차의 속도 제한, 앞지르기의 방법, 끼어들기의 금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③ 긴급자동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 ④ 소방차라 하더라도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만 긴급자동차에 해당된다.

해설 ▶ ①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하여 「도로교통법」 제151조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158조의2).
 ②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제17조), 앞지르기의 금지(제22조), 끼어들기의 금지(제23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동법 제30조).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도 앞지르기 방법(제21조) 규정은 적용된다.

※ 무료강의 및 기출문제 자료는 www.kimcodi.com 에서 제공됩니다.

- ③ 찹(Chop)이란 마치 도끼로 노면을 깎아 낸 것 같이 넓고 얇은 가우지 마크로서 프레임이나 타이어립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 ④ 요마크(Yaw Mark)란 자동차가 심하게 코너링할 때 전륜과 후륜 내륜차가 생기고 이때 바깥쪽 바퀴가 원심력에 의하여 노면과 마찰할 때 만들어진다.

정답 ①

17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누산점수’라 함은, 구체적인 법규위반·사고야기에 대하여 앞으로 정지처분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점수를 말한다.
- ②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벌점을 관리할 수 있다.
- ③ 위반사항이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인 경우 벌점은 40점이다.
- ④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 해설** ▶ ① ‘누산점수’란 위반·사고시의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를 뺀 점수를 말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 1. 가. (2)). 구체적인 법규위반·사고야기에 대하여 앞으로 정지처분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점수는 처분벌점이다([별표28] 1. 가. (3)).
- ②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벌점을 관리하지 아니한다(동법 시행규칙 제91조 제3항).
 - ③ 동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 3. 가.
 - ④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한다(동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 1. 다. (1)).

정답 ③

18 운전자를 무면허운전으로 적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제1종 대형면허만을 가진 운전자가 배기량 250cc인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 ② 제1종 보통면허만을 가진 운전자가 적재중량 12톤인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 ③ 소형견인차면허만을 가진 운전자가 적재중량 4톤인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 ④ 제1종 보통면허만을 가진 운전자가 차종의 변경 없이 승차정원 25명인 자동차에서 승차정원 12명인 자동차로 형식이 변경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단,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승인된 경우로 가정함)

- 해설** ▶ ①②④ 모두 무면허운전으로 적발할 수 있다.
- ③ 소형견인차면허만을 가진 운전자는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할 수 있으므로, 무면허운전으로 적발할 수 없다.

[핵심정리]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

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별	구분		
제1종	대형면허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삭제> 5. 건설기계 가.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나.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다.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라.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6.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이하 “구난차등”이라 한다)는 제외] 7.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면허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삭제> 4.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5.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 6.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 7.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1. 3륜화물자동차 2. 3륜승용자동차 3. 원동기장치자전거	
	특수면허	대형 견인차	1. 견인형 특수자동차 2.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소형 견인차	1.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2.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구난차		1. 구난형 특수자동차 2.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2종	보통면허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4.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 5.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1.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 2.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정답 ③

19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12개 예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②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③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④ 안전거리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해설 ▶ ①②③ 모두 '처벌특례 항목'에 해당한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④ 이는 '처벌특례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④

20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의 음주와 음주운전을 목격한 참고인이 있는 상황에서 음주운전 종료로부터 약 5시간 후 음주측정을 요구한 데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응한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
- ② 화물차를 주차한 상태에서 적재된 상자 일부가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정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
- ③ 편도 5차선 도로의 1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자동차 운전자에게 도로의 오른쪽에 연결된 소방도로에서 오토바이가 나와 맞은편 쪽으로 가기 위해서 편도 5차선 도로를 대각선 방향으로 가로질러 진행하는 경우까지도 예상하여 진행할 주의의무가 있다.
- ④ 앞지르기가 금지된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에서 앞차가 진로를 양보하였다면 앞지르기를 할 수 있다.

해설 ▶ ① 대법원 2001. 8.24. 2000도6026
 ② 화물차를 주차하고 적재함에 적재된 토마토 상자를 운반하던 중 적재된 상자 일부가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정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7. 9. 2009도2390).
 ③ 편도 5차선 도로의 1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자동차 운전자에게 도로의 오른쪽에 연결된 소방도로에서 오토바이가 나와 맞은편 쪽으로 가기 위해서 편도 5차선 도로를 대각선 방향으로 가로질러 진행하는 경우까지도 예상하여 진행할 주의의무는 없다(대법원 2007. 4.26. 2006도9216).
 ④ 도로교통법 제20조의2[개정법 제22조 제3항]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장소에서의 앞지르기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곳에서는 앞차가 진로를 양보하였다 하더라도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27. 2004도8062).

정답 ①

21 경비경찰 조직운영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부대단위활동의 원칙 - 부대를 관리하기 위한 지휘권과 장비가 편성되고 임무수행을 위한 보급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주로 하명에 의하여 임무가 이루어진다.
- ② 치안협력성의 원칙 - 업무수행과정에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과 협력을 이루어야 하고 국민이 스스로 협조해 줄 때 효과적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하다.

※ 무료강의 및 기출문제 자료는 www.kimcodi.com 에서 제공됩니다.

- ③ 체계통일성의 원칙 - 상하계급 간 일정한 관계가 형성되고 책임과 임무의 분담이 명확히 이루어지고 명령과 복종의 체계가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경찰조직 간 체계가 확립되어야만 타 기관과도 상호응원이 가능하게 된다.
- ④ 지휘관 단일성의 원칙 - 긴급하고 신속한 경비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지휘관을 한 사람만 두어야 한다는 의미로 부대활동의 성패는 지휘관에 의하여 좌우된다.

해설 → ①②③ 모두 옳은 설명이다.

- ④ 부대활동의 성패는 지휘관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것은 부대단위활동의 원칙과 관련이 깊다.

[핵심정리] 경비경찰의 조직운영의 원리

구분	내용
부대단위 활동의 원칙	경비경찰은 부대단위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반드시 지휘관이 있어야 하며 하급부대원을 관리하기 위한 지휘권과 장비가 편성되며 임무수행을 위한 보급지원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함(부대활동의 성패는 지휘관에 의하여 좌우됨)
지휘관 단일의 원칙	조직편성의 원리 중 명령통일의 원칙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긴급하고 신속성을 요하는 경비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지휘관을 한 사람만 두어야 함(의사결정 과정까지 단일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님). 이는 하급조직원은 하나의 상급조직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의미도 내포함
체계통일성의 원칙	조직의 정점으로부터 하부조직까지 계선을 통하여 상하 간에 일정한 관계가 형성되어 책임과 임무의 분담이 명확히 이루어지고 명령과 복종의 체계가 통일되어야 함
치안협력성의 원칙	업무수행 과정에서 국민과 협력을 이루어야 하고 국민이 스스로 협조해 줄 때 효과적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함

정답 ④

22 경비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비수단의 원칙 중 ‘균형의 원칙’은 상황에 따라 주력부대와 예비대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한정된 경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양하는 것이다.
- ② 경비수단의 종류 중 제지는 행정상 강제집행에 해당하고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행정상 즉시강제와 구별된다.
- ③ 경고는 간접적 실행행사이고, 제지와 체포는 직접적 실행행사이다.
- ④ 경고와 제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체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해설 → ①③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 ② 제지는 경비사태를 예방·진압하기 위하여 행하는 세력분산·통제파괴·주동자 및 주모자 격리 등을 하는 즉시강제이다.

※ 무료강의 및 기출문제 자료는 www.kimcodi.com 에서 제공됩니다.

[핵심정리] 경비수단의 종류

구 분		내 용	법적근거
간접적 실력행사	경 고	관계자에게 주의를 주고 일정한 행위를 촉구하는 사실상의 통지행위	경직법 제5조·제6조
	제 지	경비사태를 예방·진압하기 위하여 행하는 세력분산·통제파괴·주동자 및 주모자 격리 등의 즉시강제(무기 사용 가능)	경직법 제6조
직접적 실력행사	체 포	상대방의 신체를 단기간 구속하는 강제처분(무기 사용 가능)	형사소송법 제212조

정답 ②

23 행사안전경비(혼잡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법적 근거에는 「경찰법」 제3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등이 있다.
- ② 행사안전경비는 대규모의 공연, 기념행사, 경기대회, 제례의식 등 기타 각종 행사를 위해 모인 미조직원 군중에 의하여 발생하는 자연적인 혼란상태를 사전에 예방·경계하는 경비경찰 활동이다.
- ③ 「공연법」 제11조에 의하면 공연장은 공연자는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공연법 시행령」상 공연장 외의 시설에서 1,000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공연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해설** ▶ ① 「경찰법」 제3조(경찰의 임무)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위험발생의 방지),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제7조(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경비업법 시행령」 제30조(경비가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한 경비의 요청) 등이 행사안전경비의 근거가 된다.
- ② 옳은 설명이다.
 - ③ 공연장은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공연법 제11조 제1항).
 - ④ 공연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정답 ③

24 행사안전경비 중 군중 정리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밀도의 희박화 - 많은 사람이 모이면 충돌과 혼잡이 야기되어 거리감과 방향감각을 잃고 혼란한 상태에 이르므로 가급적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회피케 한다.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장소는 사전에 블록화한다.
- ② 지시의 철저 - 사태가 혼잡할 경우 계속적이고도 자세한 안내방송으로 지시를 철저히 해서 혼잡한 사태를 정리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 무료강의 및 기출문제 자료는 www.kimcodi.com 에서 제공됩니다.

- ③ 이동의 일정화 - 군중들은 현재의 자기 위치와 갈 곳을 잘 알지 못함으로써 불안감과 초조감을 갖게 되므로 여러 방향으로 이동시켜 주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 ④ 경쟁적 사태의 해소 - 경쟁적 사태는 남보다 먼저 가려고 하는 군중의 심리상태로 순서에 의하여 움직일 때 순조롭게 모든 일이 잘될 수 있다는 것을 납득시켜야 한다.

해설 ▶ ①②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③ 군중은 현재의 자기 위치와 갈 곳을 잘 몰라 불안감과 초조감을 갖게 되므로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시켜 주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핵심정리] 군중정리의 원칙

구분	내용
밀도의 희박화	제한된 면적의 특정한 지역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상호 간에 충돌현상이 나타나고 혼잡을 야기하므로 가급적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회피하게 하여야 함(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장소는 사전에 블록화함)
이동의 일정화	군중은 현재의 자기 위치와 갈 곳을 잘 몰라 불안감과 초조감을 갖게 되므로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시켜 주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함
경쟁적 사태의 해소	군중이 질서를 지키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분위기를 느끼면 남보다 먼저 가려고 하는 심리상태로 인하여 혼란상태가 발생하므로 질서있게 행동하면 모든 일이 잘될 수 있다는 것을 납득시켜야 함(차분한 목소리로 안내방송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지시의 철저	계속적이고 자세한 안내방송으로 지시를 철저히 해서 혼잡한 사태를 회피하고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음

정답 ③

25 선거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선거경비는 후보자의 자유로운 선거운동과 민주적 절차에 의한 선거를 보장하는 데 역점을 둔다.
- ② 개표소 경비 관련 3선 개념에 의하면 제1선은 개표소 내부, 제2선은 울타리 내곽, 제3선은 울타리 외곽으로 구분한다.
- ③ 제1선 개표소 내부에서 질서문란행위가 발생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요청이 없더라도 경찰 자체판단으로 경찰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 ④ 개표소별로 충분한 예비대를 확보·운영한다.

해설 ▶ ①②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③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나 위원은 개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개표가 진행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표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183조 제3항). 개표소안에 들어간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질서가 회복되거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개표소에서 퇴거하여야 한다(동법 제183조 제5항).

정답 ③

26 다중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다중범죄의 특징으로 다중행태의 예측불가능성, 확신적 행동성, 조직적 연계성, 부화뇌동적 파급성, 이성적 행동성 등을 들 수 있다.
- ㉡ 다중범죄의 참여자는 자신의 주장 등이 옳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회정의를 위하여 투쟁한다는 생각으로 투신이나 분신자살을 하는 등 과감하고 전투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은 확신적 행동성에 대한 설명이다.
- ㉢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 중 경쟁행위법은 특정사안의 불만집단에 대한 정보활동을 강화하여 사전에 불만 및 분쟁요인을 해소하는 것을 말한다.
- ㉣ 다중범죄 진압의 기본 원칙 중 봉쇄·방어는 시위대가 집단을 형성한 이후에 부대가 대형으로 진입하거나 장비를 사용하여 시위집단의 지휘·통제력을 차단하며 수 개의 소집단으로 분할시켜 시위의사를 약화시킴으로써 그 세력을 분산시키는 방법이다.

- ① ㉠㉢
- ② ㉠㉡㉣
- ③ ㉠㉡㉣
- ④ ㉡㉢㉣

해설 ▶ ㉠㉡㉣ 3 항목이 옳지 않다.

- ㉠ 다중범죄의 특징으로 다중행태의 예측불가능성, 확신적 행동성, 조직적 연계성, 부화뇌동적 파급성, 비이성적 단순성 등을 들 수 있다.
- ㉡ 옳은 설명이다.
- ㉢ 경쟁행위법은 불만집단에 반대하는 여론을 크게 부각시켜 불만집단이 위압되어 스스로 분산 또는 해산되도록 하는 방법을 말한다.
- ㉣ 봉쇄·방어는 군중들이 중요시설 등 보호대상물의 점거를 기도할 경우 사전에 진입부대가 점령하거나 바리케이드 등으로 봉쇄하여 방어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③

2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난, 인적재난, 사회재난으로 구분된다.
- ② '안전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

해설 ▶ ①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②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동법 제3조 제4호)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은 '재난관리'이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3호).

※ 무료강의 및 기출문제 자료는 www.kimcodi.com 에서 제공됩니다.

- ③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동법 제60조 제2항).
- ④ 동법 제14조 제1항

정답 ④

28 「통합방위법」상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가중요시설’이란 공공기관, 공항·항만, 주요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말한다.
- ②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 ③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국가중요시설의 평시 경비·보안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이 수행한다.

- 해설** ▶ ① 통합방위법 제2조 제13호
 ② 동법 제21조 제4항
 ③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동법 제21조 제2항).
 ④ 동법 제21조 제3항

정답 ③

29 「통합방위법」상 통합방위사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통합방위본부장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병중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 ② 대통령은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 받았을 때에는 중앙협의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 ③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합대사령관은 을중사태나 병중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도지사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을중사태 또는 병중사태를 선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방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해설** ▶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병중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통합방위법 제12조 제2항 제2호).
 ② 동법 제12조 제3항
 ③ 동법 제12조 제4항
 ④ 동법 제12조 제6항

정답 ①

※ 무료강의 및 기출문제 자료는 www.kimcodi.com 에서 제공됩니다.

30 「경찰 비상업무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일반요원’이란 필수요원을 제외한 경찰관 등으로 비상소집시 2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할 자를 말한다.
- ② 비상근무 을호가 발령된 때에는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경력 50%까지 동원할 수 있다.
- ③ 비상근무의 종류로는 경비·작전비상, 정보비상, 수사비상, 교통비상이 있고 적정이 발생하였거나 일부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경우 경비비상 을호를 발령한다.
- ④ 지방경찰청 또는 2개 이상 경찰서 관할 지역의 경우는 지방경찰청장이 비상근무 발령권자이다.

- 해설** → ① 경찰 비상업무 규칙 제2조 제6호
 ② 동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
 ③ 적정이 발생하였거나 일부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작전비상 을호를 발령한다(동규칙 제4조 제3항 [별표1]).
 ④ 동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

정답 ③

31 인질협상 및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협상은 항상 성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다음 과정인 무력제압의 예비조치가 될 가능성이 있고, 인질협상 시에는 언론과 인질범의 부모, 여자친구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② 영국의 Scot Negotiation Institute에서 제시한 인질협상의 8단계 중 5단계는 ‘타결안 제시’이고 타결안은 여러 가지 내용을 포괄하여 취급하여야 하고 개개 내용에 대한 일괄타결을 해서는 안 된다.
- ③ 영국의 Scot Negotiation Institute에서 제시한 인질협상의 8단계 중 6단계는 ‘홍정’이고 이 단계에서는 우리 측에서 줄 수 있는 한계를 분명히 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 상대로 하여금 떼를 쓰고 홍정을 걸어오도록 유도해야 한다.
- ④ 영국의 Scot Negotiation Institute에서 제시한 인질협상의 8단계 중 4단계는 ‘제안’이고 구체적인 제안사항, 즉 협상상대, 교신방법, 진행방법, 그리고 절차에 관한 제안을 차근차근 말한다.

- 해설** → ① 신속하고 정확한 통신수단을 마련하고 인질과 대화통로를 단일화하며 인질범의 부모나 여자친구 등은 현장에서 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다.
 ②③ 옳지 않은 설명이다.
 ④ 옳은 설명이다.

[핵심정리] 영국의 Scot Negotiation Institute에서 제시한 인질협상의 8단계

구분	내용
1단계 협상준비	먼저 연기를 희망하는 것, 연도록 시도할 것, 꼭 얻어야 할 것을 미리 메모해 둔다.
2단계 논쟁개시	우리 측에서 줄 수 있는 한계를 분명히 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 상대로 하여금 떼를 쓰고 홍정을 걸어오도록 유도해야 한다.

해설 ▶ 정직만 경찰공무원, 의무경찰 그리고 청원경찰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징계이다(국가공무원법 제79조,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2항 참고).
 [핵심정리] 경찰공무원, 의무경찰 및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국가공무원법 제79조,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2항)

대상자	징계의 종류
경찰공무원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의무경찰	강등, 정직, 영창, 휴가 제한, 근신
청원경찰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정답 ②

34 경호경비 중 행사장 경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MD설치 운용, 비표 확인 및 출입자 통제관리는 안전구역에서 실시한다.
- ② 원거리 불심자 검문차단은 절대안전 확보구역에서 실시한다.
- ③ 경비구역은 우발사태에 대비책을 강구하고 통상 경찰이 책임을 진다.
- ④ 제1선을 제외한 행사장 중심으로 소총 유효사거리 내외의 취약개소는 조기경보지역에 설치한다.

해설 ▶ ① 옳은 설명이다.
 ② 원거리 불심자 검문차단은 조기경보지역에서 실시한다.
 ③ 조기경보지역은 우발사태에 대비책을 강구하고 통상 경찰이 책임을 진다.
 ④ 소총 유효사거리 내외의 취약개소는 경비구역에 설치한다.

[핵심정리] 행사장 경호의 근무요령

구 분	내 용
제1선 (안전구역 : 내부)	① 절대안전 확보구역 ② 근무요령(출입자 통제관리, MD 설치 운용, 비표 확인 및 출입자 감시)
제2선 (경비구역 : 내곽)	① 주경비지역 ② 근무요령(바리케이드 등 장애물 설치, 돌발사태 대비 예비대 운영 및 구급차, 소방차 대기)
제3선 (경계구역 : 외곽)	① 조기경보지역 ② 근무요령(감시조 운영, 도보 등 원거리 기동순찰조 운영, 원거리 불심자 검문·차단)

정답 ①

35 경호의 4대 원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기 담당구역 책임의 원칙 - 경호원은 각자 자기 담당구역 내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사태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 대한 행치는 수시로 변경시키는 것이 좋다는 원칙이다.
- ② 자기희생의 원칙 -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피경호자의 신변의 안전이 보호·유지되어야 한다는

※ 무료강의 및 기출문제 자료는 www.kimcodi.com 에서 제공됩니다.

것으로서 육탄방어의 정신으로 피경호자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 ③ 하나의 통제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 - 피경호자와 접근할 수 있는 통로는 통제된 유일한 통로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여러 개의 통로는 적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취약성을 증가시키게 된다는 원칙이다.
- ④ 목표물 보존의 원칙 - 행차일시·장소·코스는 일반대중에게 비공개되어야 하고, 암살 기도자나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자들로부터 분리시켜야 한다는 원칙으로 보안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해설 → ① 경호원은 각자가 자기담당구역 내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사태에 대해서도 자신만이 책임을 지고 완벽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 대한 행차는 수시로 변경시키는 것이 좋다는 것은 목표물 보존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②③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핵심정리] 경호의 4대 원칙

구분	내용
자기희생의 원칙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피경호자의 신변의 안전이 보호·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경호원은 피경호자가 위기가 처했을 때는 육탄방어의 정신으로 피경호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자기담당구역 책임의 원칙	경호원은 각자가 자기담당구역 내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사태에 대해서도 자신만이 책임을 지고 완벽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자기담당구역이 아닌 타 지역상황은 결코 책임을 질 수도 없고 비록 인근지역에 특별한 상황이 발생되었다고 해서 자기책임구역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
하나의 통제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	피경호자와 접근할 수 있는 통로는 통제된 유일한 하나이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여러 개의 통로는 적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취약성을 증가시키게 된다.
목표물 보존의 원칙	피경호자를 암살하거나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자들로부터 분리시켜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를 보안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① 행차일시·장소·코스는 일반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아야 한다. ②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 대한 행차는 수시로 변경시키는 것이 좋다. ③ 대중에게 노출된 도보행차는 가급적 제한되어야 한다.

정답 ①

36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으로 한다.
- ②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를 실행·계획·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하여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국인·외국인을 말한다.
- ③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해 국가정보원장에게 일시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하다.
- ④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상의 국내일반, 군사, 해양, 항공, 국외, 화학, 생물, 방사능의 8개 테러사건 대책본부 중 화학·생물·방사능 대책본부를 폐지하고 지원본부로 전환하였다.

※ 무료강의 및 기출문제 자료는 www.kimcodi.com 에서 제공됩니다.

- 해설** ▶ ①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한다(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5조 제1항·제2항).
- ②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그 밖에 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3호). 테러를 실행·계획·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하여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국인·외국인은 외국인테러전투원이다(동법 제3조 제4호).
- ③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국인·외국인에 대하여 일시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동법 제13조 제1항).
- ④ 옳은 설명이다.

정답 ④

37 경찰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지금까지의 경찰윤리교육은 개인의 청렴도 등을 강조하는 거시적 접근법 위주로 이루어져왔다.
- ② 경찰서장이 ‘수당 허위 수령 금지’의 교양을 하였음에도 A순경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하였다면 사회적·외적 윤리의 무지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 ③ 클라이니히의 분류에 따르면 경찰윤리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도덕적 전문능력의 함양이다.
- ④ 경찰윤리는 실제 생활에서 일어나는 윤리적 상황의 해결에 도움을 주는 응용윤리적 성격을 가지므로 ‘학제적 접근’은 필요하지 않다.

- 해설** ▶ ① 지금까지의 경찰윤리교육은 개인의 청렴도 등을 강조하는 미시적 접근법 위주로 이루어져왔다.
- ② 경찰서장이 ‘수당 허위 수령 금지’의 교양을 하였음에도 A순경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하였다면 사회적·외적 윤리의 거부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 ③ 옳은 설명이다.
- ④ 경찰윤리는 실제 생활에서 일어나는 윤리적 상황의 해결에 도움을 주는 응용윤리적 성격을 가지므로 여러 학문의 성과를 토대로 구성되는 ‘학제적 접근’이 필요하다.

정답 ③

3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강의·강연·기고 등)에 대한 사례금을 기준 상한액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초과 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신고할 때 사례금이 얼마인지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 상한액으로 먼저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를 보완해야 한다.
- ③ 파출소장이 파출소 직원들에게 위로·격려·포상의 목적으로 회식비를 제공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④ 각 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 및 공무원수행사인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 무료강의 및 기출문제 자료는 www.kimcodi.com 에서 제공됩니다.

- 해설** ▶ 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1항
 ②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③ 동법 제8조 제3항 제1호
 ④ 동법 제2조 제2호 다목·라목, 제11조

정답 ②

39 '경찰윤리강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찰윤리강령의 문제점 중 '행위 중심적 성격'은 경찰관의 도덕적 자각에 따른 자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요구되는 것으로서 타율성으로 인해 진정한 봉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 ② 경찰윤리강령은 대외적으로 조직구성원의 자질통제 기준, 국민과의 공공관계의 개선, 과도한 요구에 대한 책임 제한 등과 같은 기능을 한다.
- ③ 경찰윤리강령은 시민이 바라는 윤리표준에 맞는 행동규범을 정하여 조직구성원들이 따르게 하기 위해 추상적 행동규범을 문서화한 것이다.
- ④ 경찰서비스현장에는 친절한 경찰, 의로운 경찰, 공정한 경찰, 근면한 경찰, 깨끗한 경찰의 5개항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 해설** ▶ ① '행위 중심적 성격'은 경찰윤리강령은 행위중심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행위 이전의 의도나 동기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경찰관의 도덕적 자각에 따른 자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요구되는 것으로서 타율성으로 인해 진정한 봉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비진정성의 조장을 말한다.
 ② 경찰윤리강령은 대외적으로 국민과의 공공관계의 개선이나 과도한 요구에 대한 책임 제한 등의 기능을 하고, 대내적으로 조직구성원의 자질통제 기준이나 조직에 대한 소속감 고취 등의 기능을 한다.
 ③ 옳은 설명이다.
 ④ 1991년 제정된 경찰현장에서 친절한 경찰, 의로운 경찰, 공정한 경찰, 근면한 경찰, 깨끗한 경찰의 5개항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정답 ③

40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규정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소속관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 ② 공무원은 1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해당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각종 증명서 발급 등 단순 민원업무는 제외).
- ③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직접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 제외한다)에는 서면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무료강의 및 기출문제 자료는 www.kimcodi.com 에서 제공됩니다.

- ④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는 비용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소속관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신고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해설** ▶
-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 제1항).
 - ② 공무원은 3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해당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서면 (전자문서 포함)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동강령 제5조 제1항 제7호).
 - ③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직접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서면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동강령 제16조 제1항).
 - ④ 동강령 제16조의3 제1항

정답 ④